

기초자치단체 국제교류의 영향요인: 담당 공무원의 주관적 인식을 중심으로*

이 석 환** · 이 충 희***

논 문 요약

본 연구는 객관적 통계 자료와 주관적 인식 자료를 함께 활용하여 기초자치단체의 국제 교류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함으로써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객관적 현황 분석, 담당 공무원의 주관적 인식 분석, 잠재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연구가설 검증을 위한 음이항 회귀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첫째, 객관적 현황 분석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일부 국가 편중이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주관적 인식조사는 국제교류 담당 공무원은 국제 교류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국제교류는 형식적인 자매결연 중심이고 핵심주체는 단체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셋째, 신뢰성 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잠재변수 측정모형의 신뢰성, 수렴타당성, 판별타당성이 우수 또는 양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 음이항 회귀분석 결과는 잠재변수 중 제도적 기반과 성과인식 그리고 통제변수인 규모와 재정능력은 모두 국제교류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잠재변수 중 인력 전문성과 협력적 거버넌스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국제교류의 추진, 활성화, 내실화를 위해서는 견고한 제도적 기반과 성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제어: 국제교류, 기초단체, 국제교류 성과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B8096026).

** 제1저자

*** 교신저자

I. 서론

전통적으로 국제교류는 국가가 주체인 외교(diplomacy)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전통적 외교의 한계가 축적되고, Nye(2004)가 연성권력(soft power)¹⁾이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외교적 네트워크의 확장과 다양한 국가 구성원의 외교 참여를 강조하면서 지방정부가 국제교류의 핵심 주체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후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 중심의 전통적 외교의 한계 극복, 지역발전의 새로운 활로 모색,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토대 마련, 지역 경제 활성화, 교류협력의 파급효과 창출 등의 목적을 위해 적극적으로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도 국제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였는데, 특히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1990년대 중반 이후에 국제교류 건수가 폭증하였다. 2020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총 84개 국가의 1,311개 지방정부와 1,749건의 국제교류를 공식적으로 체결하여 실행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가 활성화되면서 국제교류는 학술적 연구의 주요 주제로 부상하였다. 국제교류에 관한 선행연구는 활성화 방안 연구, 영향요인 연구, 기타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초기의 활성화 방안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현황을 분석하여 전담 조직의 설치, 충분한 예산의 확보, 전담 인력의 확충 및 전문성 제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을 국제교류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예, 김부찬 외, 2007; 박용길, 2003; 성태규·이재현, 2007; 유병선, 2018; 이성근·서동수, 2008). 다음으로, 영향요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실적이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목적인데, 전담조직, 제도화 수준, 예산, 인력의 전문성, 중앙정부의 지원, 규모, 재정능력 등이 유효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예, 우양호·이정석, 2010; 이정주·최외출, 2003; 이정주 외, 2013; 정명은, 2010; 하영수, 2010). 언급할 만한 기타 연구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를 대상으로 동형화 기제(mechanisms of isomorphism)를 검증한 김미연(2010), 기초단체 국제교류의 확산(diffusion)을 검증한 정명은(2012), 연결망 분석(network analysis)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한 김재근·서인석(2012) 등이 있다.

이상에서 검토한 선행연구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를 이해하고 국제교류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정보들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국내 선행연구는 실증적 연구의

1) Nye(2004: 94-97)의 연성권력은 군사력과 경제력 등의 물리적 외교 수단과 구분되는 문화나 정치적 가치 등의 비물리적 자원을 활용하는 외교적 수단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는 연성권력을 국가의 이미지 제고를 통한 외교적 지위 또는 외교적 상호관계 강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전략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연성권력은 전통적 국가 중심의 외교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를 강조한다. 그는 다양한 행위자 중심의 외교는 네트워크의 범위를 확대하여 외교적 관계의 밀집성과 긴밀성을 강화할 수 있고, 이를 연성권력의 기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부족, 객관적 통계자료 또는 주관적 인식자료에 대한 배타적 의존, 부적절한 분석방법의 사용 등의 한계를 안고 있다. 우선, 선행연구는 지방정부 국제교류의 활성화나 내실화 방안을 제시한 규범적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영향요인 검증 등 국제교류 현상을 경험적으로 설명하려는 실증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희소하다. 둘째, 실증적 선행연구는 주관적 인식자료(예, 우양호·이정석, 2010; 이정주 외, 2013; 하영수, 2001) 또는 객관적 통계자료(예, 이정주 외, 2001; 정명은, 2012)에 배타적으로 의존하여 수행되었다. 셋째, 선행연구는 주로 공무원의 주관적 인식에 기초하여 측정된 국제교류 수준을 분석하였고(예, 오니시 유타카, 2015; 우양호·이정석, 2010; 이성근·서동수, 2008; 이정주 외, 2013; 이주호 외, 2007; 하영수, 2001; 홍성우, 2011),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건수를 분석한 연구(이정주 외(2001)와 정명은(2012)뿐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국제교류 건수를 분석한 연구(이정주 외, 2001; 정명은, 2012)는 종속변수의 특성에 적합한 포아송(Poisson)이나 음이항(negative binomial) 회귀분석이 아니라 통상최소제곱(ordinary least squares)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결과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객관적 통계 자료와 주관적 인식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기초자치단체(이하 기초단체)의 국제교류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함으로써 선행연구가 지닌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다. 연구의 분석단위는 기초단체 국제교류 담당 공무원이고, 국제교류 실적은 2016~2020년 동안의 누적 국제교류 건수로 측정하였다. 기초단체 국제교류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공무원의 주관적 인식에 기초하여 측정된 잠재변수(latent variable)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측정된 객관적 여건의 두 가지 유형을 모두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sisterhood relationship)과 우호협력(friendship)에 대한 객관적 통계자료 분석, 기초단체 국제교류에 대한 공무원의 주관적 인식 분석, 연구모형에 포함된 잠재변수의 신뢰성(reliability) 및 타당성(validity) 분석, 연구가설 검증을 위한 포아송 및 음이항 회귀분석 등이다.

II. 국제교류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연구가설

1. 지방정부 국제교류의 의의

1) 지방정부 국제교류의 정의, 목적, 유형

다양한 학술적 및 실천적 정의를 종합하면, 국제교류는 국가, 지방정부, 기업, 시민단체, 개인 등의 다양한 주체가 상호의 이해증진, 친선, 이익도모 등을 목적으로 경제, 문화, 교육, 관광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및 협력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국제교

류는 국가가 주체인 외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외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국제교류의 핵심 주체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합의된 지방정부의 국제교류에 대한 정의는 없다. 예로, 지방정부 국제교류는 지역 상호간 문화, 전통, 가치관의 수평적 교류(신기현, 1998), 다양한 행위주체를 중심으로 한 협력관계(김판석, 2000), 친선교류를 통해 지방정부 수준의 협력관계 구축(하영수, 2001),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외국 지역의 주체들과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영역에서 교류·협력하는 종합적 활동(우양호·이정석, 2010)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된다. 그런데 선행연구는 공통적으로 중앙정부의 독점적 국제교류인 외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지방정부의 독자적 국제교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국제교류는 중앙정부 중심의 전통적 외교의 한계 극복, 지역발전의 새로운 활로 모색,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토대마련, 지역경제 활성화, 교류협력의 파급효과 창출 등의 다양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예로,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 - 이하 UCLG)²⁾에 의하면, 지방정부의 국제교류는 분권화된 협력(decentralized cooperation)을 통해 외교 행위자를 확대하여 전통적 외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체수단으로 기능하고, 지방정부는 국제교류를 통해 외부자원을 확보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한다(UCLG 홈페이지). 또한 네덜란드국제관계연구소(Netherlands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는 첫째, 지방정부의 국제교류는 중앙정부의 관여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주권침해 등의 외교적 논쟁을 희석시켜 국제 갈등을 예방하고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고, 둘째, 지방정부는 국제교류를 통해 지역 기업이 세계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성장을 유도할 수 있으며, 셋째, 지방정부는 기여외교(contribution diplomacy)³⁾를 통해 지역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교류협력의 파급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한다(Clingendael Institute 홈페이지).

지방정부 국제교류는 자매결연과 우호협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매결연은 외국 지방정부와 우호적 제휴를 구축하여 공동 관심사에 대해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매결연은 일반적으로 지방정부 간 행정, 경제, 문화, 인력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지향한다는 교류협력의 합의를 문서로서 공식화하여 체결한다(송두범, 2004: 1; 우양호·이정석, 2010: 379; 전국시도지사협의회, 2015: 69). 한편, 우호협력은 자매결연 이전의 지방정부 간 합의로서 주로 초기의 교류단계를 지칭한다(우양호·이정석, 2010: 379). 자매결연과 우호협력의 추진방식은 유사하나,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0호) 및 시행령(제37조)에 따르면, 자매결연은 체결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수이지만, 우호협력은 지방의회의

2) UCLG는 중앙정부의 외교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지방정부의 참여를 도모하는 비정부 연합체로서 지방자치단체연합(IULA)과 세계도시연맹(UTO)을 통합하여 출범하였다.

3) 기여외교는 지방정부가 친선교류, 즉 지방정부 간 협약, 지역 민간 영역의 교류 확대, 적극적 협력, 공무원 연수 등의 장기적 교류협력을 통해 파생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김형수, 2021: 86; 우양호·이정석, 2010: 379).

또한, 지방정부 국제교류는 역사, 문화, 경제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교류영역에 기초하여 국제교류를 역사교류, 문화마케팅, 네트워크, 교육교류, 도·농교류 등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정병관, 2009: 42-44). 역사교류형은 역사적 경험의 동질성, 역사 정신의 계승 발전, 역사적 유적지 상호 보존 등을 매개로 지방정부 간 우호적 협력 관계를 체결하는 것이고, 문화마케팅형은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자원을 관광 산업화한 지역 축제 교류 및 상호정보교환 등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상호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교류 범주에 포함되는 네트워크형은 지역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교류 유형인데,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 교육교류형은 유학생 교류를 활성화여, 교육기회 제공, 교육협력, 유학생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향한다. 도·농교류형은 도시와 농촌 지역 간에 일어나는 교류형태로서, 도시의 안정적인 먹거리 보장과 농촌 소비재 제공 등의 상호 교환적 협력관계를 구축한다(정병관, 2009, 42-44).

2) 국제교류 행위자로서의 지방정부의 역할

비교적 최근에 전통적 외교 및 외교 전략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다수 국가들이 Nye(2004)의 연성권력 개념에 기초하여, 외교수단의 다양화와 외교적 네트워크의 확장을 강조하고 있다. 연성권력은 중앙정부 중심의 독점적 외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외교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외교 영역에 다양한 국가 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한다(Nye, 2004). 특히, 기술발전은 인적자원의 교류확대와 정보공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중앙정부의 독점적 외교 공간을 약화시켰고, 다양한 행위자의 국제교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네트워크 공간을 마련하였다. 국제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공간이 구축됨에 따라 외교 영역에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고, 다양한 외교적 이슈와 다각적 국제교류 방안 등이 등장하였다.

Keohan & Nye(1974)는 초정부적(transgovernmental) 개념을 통해 중앙정부 하위 단위(sub-units of national government)의 교류 공간을 설명하였고, Risse-Kappen(1995)은 초정부적 네트워크(transgovernmental network) 개념을 활용하여 중앙정부 하위 단위 간 네트워크(those among state officials in sub-units of national government) 공간을 제시하고 지방정부의 교류활동을 네트워크 공간에 포함시켰다. Coleman(1990: 300)은 국제교류를 통해 형성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상호신뢰를 중심으로 구축된 사회적 연결망으로 정의하고, 네트워크가 거래비용 및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상호교류의 긍정적 이익을 창출한다고 주장한다. Pluijm & Melissen(2007)은 중앙정부 외교 독점의 분권화(decentralization)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방정부를 외교의 주요 행위자로 규정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네트워크 개념에 기초하여 지방정부의 외교적 공간을 규정하고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강조한다.

국내의 학술적 연구들도 네트워크 개념을 차용하여 국제교류에서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역할을 설명한다(김재근·서인석, 2012; 신기현, 1998; 이정남, 2006; 장세길, 2008). 지방정부 국제교류의 활성화가 지방정부 간 경쟁적 확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있지만(장세길, 2008: 487-489), 국내 연구는 전반적으로 지방정부 국제교류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지방정부의 국제교류는 지역의 문화, 정체성, 가치관 등을 상호 존중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지방정부 간 연결, 교류,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한다(신기현, 1998: 89; 이정남, 2006: 283). 이러한 국제교류 네트워크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 통로로서 기능하고 참여한 구성원은 국제교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정부는 국제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과정에서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정부역량을 제고하며, 시장경쟁체제에서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요컨대, 신뢰, 믿음, 가치 등에 기초한 지방정부 국제교류는 수평적 사회 연결망으로 작용하여 유대감 형성과 긍정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2. 지방정부 국제교류의 영향요인 및 연구가설

지방정부 국제교류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활성화를 위한 요인으로는 국제교류를 위한 제도적 기반(양기호, 2006; 우양호·이정석, 2010; 이갑영, 2005; 이정주 외, 2001; 정명은, 2012), 담당 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우양호·이정석, 2010; 이정주 외 2013), 협력적 거버넌스(김지희, 2008; 오성동, 2007; Harrison, 2007), 국제교류의 성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성근·서동수, 2008; Ariño 외, 1997; Harrison, 2007) 등이 제시되었다.

첫째, 제도적 기반은 국제교류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여건을 의미하는데, 권한과 기능, 예산, 조례 등이 핵심 요소로 제시되었다(김부찬 외, 2007; 김형수, 2017; 이성근·서동수, 2008; 전병관, 2009).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관련 권한 및 기능은 지방자치제의 부활 이후 대폭 강화되었고, 「공공외교법」은 제7조 제1항에서 공공외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까지 규정하고 있다.⁴⁾ 국제교류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제정을 통해 제도화 하는 것이 요구된다(김형수, 2017; 이성근·서동수, 2008).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김부찬 외, 2007; 이성근·서동수, 2008; 전병관, 2009). 경험적 선행연구에서는 권한과 기능(우양호·이정석, 2010), 제도화 수준(우양호·이정석, 2010; 유병선, 2018; 이정주·최외출, 2003), 예산(우양호·이정석, 2010; 이정주 외, 2013; 이정주·최외출, 2003)이 국제교류 실적과 긍정적 관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이론적 주장

4) 여전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외교적 활동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약 체결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대외합의서, 기관 간 약정, 양해각서 수준으로 한정된다(김형수·노병렬, 2016: 105-106).

과 선행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아래의 연구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제도적 기반 가설: 지방정부의 제도적 기반이 좋을수록 국제교류 실적이 좋을 것이다.

둘째, 전문성은 국제교류를 실행하는 주체인 담당조직 및 인력의 역량을 의미하는데, 전담 조직 및 인력의 언어능력, 국제적 마인드, 교류지역 관련 지식, 경제·통상 지식 등의 하위 차원으로 구성된다(김부찬 외, 2007; 김형수, 2017; 박용길, 2003; 유병선, 2018). 대상지역 선정, 계획 수립, 협정 체결 및 실행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목적인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담당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국제적 마인드와 경제·통상지식은 담당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소양에 해당하며, 교류지역 선정과 협약체결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언어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경험적 선행연구에서 전담조직의 존재(우양호·이정석, 2010; 이정주 외, 2013)와 조직 또는 인력의 규모(이성근·서동수, 2008; 이정주 외, 2001)가 국제교류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언어능력, 국제화 마인드, 경제·통상 지식 등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국제교류 실적 또는 성과와 긍정적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우양호·이정석, 2010; 이성근·서동수, 2008; 이정주 외, 2001). 이상의 이론적 논의 및 경험적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전문성과 국제교류 실적 간의 관계는 아래 가설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

인력 전문성 가설: 국제교류 담당인력의 전문성이 좋을수록 국제교류 실적이 좋을 것이다.

셋째, 지방정부가 성공적으로 국제교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전문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대학 등 유관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국제교류 역량이 부족한 지방정부로서는 중앙정부와 전문기관(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나 한국국제협력단 등)으로부터 교육, 재정, 정보 등과 관련된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외교부, 2021). 또한, 지역 대학이나 시민(단체)의 지지와 참여는 국제교류의 촉매(catalysis)로서 작용하고, 국제교류 추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우양호·이정석, 2010: 400-401; 오성동, 2007: 148; 김지희, 2008: 103; Harrison, 2007: 314-317). 경험적 선행연구에서는 국제교류 관련 기관과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지역주민들은 지방정부 행정구역 내의 민간기업, 시민단체, 대학, 연구기관 등을 중요한 국제교류 행위자로 인식하고 있고(김부찬 외, 2007), 중앙정부와 전문기관의 협조가 지방정부 국제교류 실적과 성과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우양호·이정석, 2010; 이정주 외, 2013; 하영수, 2001). 이상의 논의에 따른 협력적 거버넌스와 국제교류 실적 간의 관계는 아래의 연구가설과 같다.

협력적 거버넌스 가설: 국제교류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이 좋을수록 국제교류 실적이 좋을 것이다.

넷째, 이해관계자의 국제교류 성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국제교류의 동기(motivation)를 형성하고 국제교류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지방정부는 지역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의 국제화 수준 향상, 지방정부의 이미지 향상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정치, 경제, 행정, 문화 등의 분야에서 국제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다(Ariño 외, 1997: 31-32; Harrison, 2007: 316). 지역발전 등 국제교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성과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긍정적 인식은 국제교류의 지속성과 활성화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이성근·서동수, 2008: 139-140; Harrison, 2007: 316). 이러한 국제교류 성과에 대한 인식과 국제교류 실적 간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주장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 특히, 이정주 외(2013)는 공무원의 국제교류 성과에 대한 인식과 국제교류 실태에 관한 인식 간의 관계를 밝혀냈고, 이주호 외(2007)는 국제교류 성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국제교류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에 의하면 국제교류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국제교류 실적도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성과인식 가설: 국제교류의 성과에 대한 인식이 좋을수록 국제교류 실적이 좋을 것이다.

III. 연구설계

1. 연구모형

연구모형은 국제교류 실적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가설과 기타 국제교류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변수를 종합하여 구성하였다. 기초단체 국제교류 실적을 종속변수로 하고 연구가설에 포함된 변수와 기타 영향요인을 독립변수로 하는 연구모형은 아래의 함수식 (1)과 같다:

$$NIE_i = f(INS_i, PRO_i, GOV_i, PER_i, X_{i,k}) \quad (1)$$

여기서 i 는 기초단체 i 의 국제교류 담당 공무원, NIE 는 국제교류 실적, INS 는 제도적 기반, PRO 는 인력 전문성, GOV 는 협력적 거버넌스, PER 은 성과인식, X_k 는 국제교류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단체 수준의 k 개 변수를 각각 의미한다.

국제교류에 대한 객관적 실적과 공무원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경험적 선행연구(양기호,

2006; 우양호·이정석, 2010; 정명은, 2012; Watson, 2000; Wendt, 1987)에 기초하여 기초단체의 규모와 재정능력을 기초단체 수준의 통제변수(X_k)로 선정하였다. 규모는 클수록 교류 활동이 활발할 것이라는 이론적 주장 및 경험적 연구결과(양기호, 2006; 정명은, 2012; Wendt, 1987)를 반영하기 위해 연구모형에 포함하였으며, 재정능력은 좋을수록 국제교류가 활발할 것이라는 이론적 주장 및 경험적 연구결과(우양호·이정석, 2010; Watson, 2000)를 반영하여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2. 변수의 측정

함수식 (1)의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는 측정변수와 잠재변수 두 가지 유형이다. 측정변수는 객관적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한 종속변수와 통제변수이고, 잠재변수는 제도적 기반(*INS*) 등의 독립변수이다. 잠재변수는 기초단체 국제교류 담당 공무원의 주관적 인식을 리커트(Likert) 7점 척도(①매우 그렇지 않다 ~ ⑦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 독립변수인 잠재변수별 설문문항, 통제변수의 명칭, 측정방법, 참고문헌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종속변수인 국제교류 실적(*NIE*)은 이정주 외(2001)와 정명은(2012)을 참고하여 2016~2020년의 기간에 기초단체가 체결한 국제교류의 누적 건수로 측정하였다. 통제변수 중 규모는 2016~2020년의 평균 기초단체 공무원 현원(명)으로 측정하였고, 재정능력은 2016~2020년의 평균 주민 1인당 자부세입(천 원)으로 조작화하였다. 잠재변수인 제도적 기반, 인력 전문성, 협력적 거버넌스, 성과인식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적 기반(*INS*)의 측정문항은 이성근·서동수(2008), 우양호·이정석(2010), 이정주 외(2013) 등을 참고하여 담당부서의 권한 충분성(q701), 담당부서의 기능 충분성(q702), 국제교류 관련 제도 구비 정도(q703), 국제교류 예산의 충분성(q104)의 네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인력 전문성(*PRO*)의 측정문항은 김부찬 외(2007), 이주호 외(2007), 이성근·서동수(2008), 우양호·이정석(2010) 등을 참고하여 규모의 적절성(q705), 외국어 능력(q706), 교류국가 관련 지식(q707), 국제적 마인드(q708), 경제·통상 지식(q709)의 다섯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협력적 거버넌스(*GOV*)의 측정문항은 김부찬 외(2007), 이주호 외(2007), 우양호·이정석(2010) 등을 참고하여 중앙정부와의 협력(q801), 광역단체와의 협력(q802), 민간기업과의 협력(q803), 공공기관과의 협력(q804), 시민단체와의 협력(q805)의 다섯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넷째, 성과인식(*PER*)의 측정문항은 김부찬 외(2007)와 오니시 유타카(2015) 등을 참고하여 전반적 지역발전 기여(q901),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q802), 기초단체 이미지 제고(q803), 기초단체 국제화 수준 향상(q804)의 네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1〉 변수의 측정

변수	측정문항 및 방법	선행연구
교류실적 (<i>NIE</i>)	2016~2020년의 기초단체 국제교류의 누적 건수	이정주 외(2001) 정명은(2012)
제도적 기반 (<i>INS</i>)	q701. 우리 지자체 국제교류 담당부서가 보유한 권한은 충분하다	우양호 외(2010) 이성근 외(2008) 이정주 외(2013)
	q702. 우리 지자체 국제교류 담당부서에 배분된 기능은 충분하다	
	q703. 우리 지자체의 국제교류를 위한 제도(조례 등)는 잘 마련되어 있다	
	q704. 우리 지자체의 국제교류 관련 예산은 충분하다	
인력 전문성 (<i>PRO</i>)	q705. 우리 지자체의 국제교류 담당인력은 충분하다	김부찬 외(2007) 우양호 외(2010) 이성근 외(2008) 이주호 외(2007)
	q706. 우리 지자체 국제교류 담당인력의 언어능력은 충분하다	
	q707. 우리 지자체 국제교류 담당인력의 교류대상 국가 관련 지식은 충분하다	
	q708. 우리 지자체 국제교류 담당인력의 국제적 마인드는 충분하다	
협력적 거버넌스 (<i>GOV</i>)	q709. 우리 지자체 국제교류 담당인력의 경제·통상 지식은 충분하다	김부찬 외(2007) 우양호 외(2010) 이주호 외(2007)
	q801. 국제교류에서 우리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협력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	
	q802. 국제교류에서 우리 지자체와 광역단체의 협력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	
	q803. 국제교류에서 우리 지자체와 민간기업의 협력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	
	q804. 국제교류에서 우리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협력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성과인식 (<i>PER</i>)	q805. 국제교류에서 우리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협력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	김부찬 외(2007) 오니시 유타카 (2015)
	q901. 우리 지자체의 국제교류는 전반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q902. 우리 지자체의 국제교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q903. 우리 지자체의 국제교류는 지자체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규모	q904. 우리 지자체의 국제교류는 지자체 국제화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우양호 외(2010) 정명은(2012)
	2016~2020년의 공무원 현원 평균(명)	
재정능력	2016~2020년의 주민 1인당 자주세입 평균(천 원) 자주세입=(지방세+세외수입+교부세+교부금+보전금)	이정주 외(2001) 정명은(2012)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방법은 국제교류에 대한 객관적 현황 분석, 국제교류에 대한 공무원의 주관적 인식 분석, 잠재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연구가설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등이다. 먼저, 시계열도표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고, 광역단체별 국제교류 현황을 분석하였다. 둘째, 기초단체 국제교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국제교류의 중요성 및 필요성, 실질적 국제교류의 정도, 국제교류의 핵심 분야, 국제교류의 추진 주체 등에 대한 공무원의 주관적 인식을 분석하였다. 셋째, 제도적 기반(*INS*) 등의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의 신뢰성은 크론바흐의 알파 계수(Cronbach's α coefficient)를 이용하여 검증하였고, 측정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은 잠재변수와 측정문항 간의 가설적 관계

를 검증하는 방법인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함수식 1)의 추정은 종속변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고자 하였다. 즉, 종속변수인 국제교류 실적(*NIE*)이 음이 아닌 정수 값(non-negative integer value)을 갖는 가산변수(count variable)라는 것을 고려하여, 포아송 회귀모형과 음이항 회귀모형을 모두 추정하고, 종속변수의 과대산포(overdispersion) 여부를 검증하여 타당한 추정모형을 선택하였다.

IV.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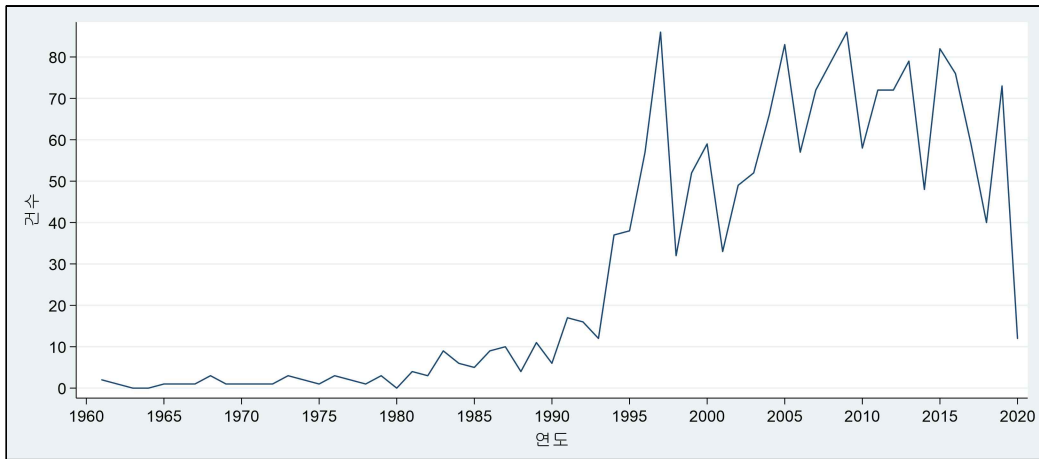
1. 국제교류 현황

1995년 6월 27일 지방선거와 함께 부활한 지방자치제는 국제교류 권한을 포함한 많은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통제나 간섭 없이 외국 지방정부와 행정, 경제, 문화, 사회, 인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제교류를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최초 국제교류는 경남 진주시의 교류로 기록되어 있다. 1961년 1월 10일 진주시는 미국 오리건주 유진시(Eugene City, Oregon)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다. 이후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는 매년 평균 29.2건이 증가하였고, 2020년 12월 누적 국제교류 건수는 1,749건이다. <그림 1>은 1961~2020년의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현황이다.

<그림 1>을 보면, 1961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1990년대 중반 이후 증가폭이 급격히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제의 부활 이전,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1960년대 10건, 1970년대 18건, 1980년 61건으로 총 89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1990년대 353건, 2000년대 636건, 2010년대 659건 등 총 1,648건으로 집계되었다. 2020년의 국제교류는 총 12건으로 갑작스럽게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한 가지 특성은 소수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2020년 12월까지의 지방자치단체 누적 국제교류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 지방정부와의 교류가 672건으로 38.4%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 208건(11.9%), 미국 185건(10.6%), 베트남 81건(4.6%), 러시아 59건(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상위 5개 국가 지방정부와의 교류 비중이 68.9%(=1,205/1,749*100)로 매우 높으며, 이러한 편중은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유사성, 교역량, 전통적인 우호관계 등이 국제교류 체결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국제교류 현황



〈표 2〉는 2020년 12월 기준의 광역단체별 국제교류 현황이다. 〈표 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총 84개 국가의 1,311개 지방정부와 1,749건의 국제교류를 공식적으로 체결하였다. 광역단체는 총 72개 국가의 347개 지방정부, 평균 16.4개 국가의 27.5개 지방정부와 교류를 체결하였다. 광역단체 중 서울이 48개 국가의 71개 지방정부와 교류를 체결하여 가장 활발하게 교류를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경기도 25개 국가의 40개 지방정부, 부산 27개 국가의 37개 지방정부, 인천 18개 국가의 37개 지방정부 순이다. 반면, 세종특별자치시와 전북은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 국제교류가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7월 1일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는 3개 국가의 4개 지방정부와 그리고 전북은 4개 국가의 10개 지방정부와 교류를 체결하였다.

기초단체는 4개를 제외한 225개가 70개 국가의 1,014개 지방정부와 국제교류를 체결하였고, 평균 1.3개 국가의 5.5개 지방정부가 교류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⁵⁾ 기초단체 중 경남 창원시가 13개 국가의 31개 지방정부와 교류를 체결하여 가장 활발하게 국제교류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경북 포항시 10개 국가의 27개 지방정부, 서울 구로구 7개 국가의 18개 지방정부, 서울 서초구 10개 국가의 18개 지방정부, 충남 아산시 9개 국가의 18개 지방정부, 경북 경주시 11개 국가의 18개 지방정부 등의 순으로 국제교류 실적이 높다. 반면, 서울 도봉구 등 22개 기초단체의 교류실적은 1건이고, 울산 동구, 전남 진도군, 경북 군위군과 성주군의 국제교류 실적은 없다.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의 국제교류 현황은 국제교류 체결에 도시화 수준과 규모 등의 요인이 작용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도시화 수준이 높고 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체결현황이 전반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5) 2020년 현재, 자치권을 보유한 기초단체는 226개이나, 〈표 2〉의 기초단체 국제교류 현황에는 2012년 폐지된 충남 연기군과 자치권이 없는 제주도의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포함되었다.

〈표 2〉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현황(2020년 12월)

광역 유형	광역		기초				합계			
	대상 국가	대상 지역	기초수	대상 국가		대상 지역		국가	지역	건수
				소계	평균	소계	평균			
서울	48	71	25	30	1.2	147	5.9	56	218	228
부산	27	37	16	9	0.6	47	2.9	27	84	88
대구	12	25	8	8	1.0	27	3.4	16	51	52
인천	18	37	10	10	1.0	53	5.3	21	88	91
광주	12	22	5	3	0.6	13	2.6	14	35	35
대전	24	34	5	5	1.0	12	2.4	25	46	46
울산	14	19	4	11	2.8	23	5.8	18	42	42
세종	3	4						3	4	4
경기	25	40	31	40	1.3	217	7.0	43	256	264
강원	16	29	18	23	1.3	113	6.3	28	142	143
충북	11	16	11	10	0.9	60	5.5	15	76	76
충남	13	28	16	18	1.1	96	6.0	26	124	125
전북	4	10	14	15	1.1	69	4.9	15	79	80
전남	12	30	21	25	1.2	118	5.6	30	148	151
경북	16	27	21	24	1.1	114	5.4	30	140	144
경남	15	24	18	22	1.2	116	6.4	28	140	142
제주	9	14	2	6	3.0	24	12.0	12	38	38
합계	72	347	225	70		1,014		84	1,311	1,749
평균	16.4	27.5		16.2	1.3	78.1	5.5	23.9	100.6	102.9

자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https://www.gaok.or.kr/gaok/exchange/list.do?menuNo=200080>)를 보았음.

2. 국제교류에 대한 공무원의 주관적 인식

기초단체 공무원의 국제교류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였다. 설문대상은 전국 226개 기초단체의 국제교류 담당 공무원이고, 설문조사는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로 2021년 7월 20일에서 8월 6일까지 18일간 진행하였다. 국제교류에 대한 공무원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분석은 회수된 129개 표본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1) 국제교류의 중요성과 필요성

기초단체 국제교류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가 아래의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국제교류의 중요성에 대한 응답결과는 ⑥그렇다가 53명

(41.1%)으로 가장 높고, ⑦매우 그렇다 31명(24.0%), ⑤다소 그렇다 28명(21.7%), ④보통이다 13명(10.1%), ③다소 그렇지 않다 3명(2.3%), ①매우 그렇지 않다 1명(0.8%)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제교류의 중요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112명(86.8%)이고, 중위수는 6점이며, 평균은 5.713점으로 나타나, 기초단체 공무원은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국제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결과 역시 ⑥그렇다가 56명(43.4%)으로 가장 높고, ⑦매우 그렇다 33명(25.6%), ⑤다소 그렇다 27명(20.9%), ④보통이다 12명(9.3%), ③다소 그렇지 않다 1명(0.8%)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제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116명(89.9%)이고, 중위수는 6점이며, 평균은 5.837점으로 나타나, 기초단체 공무원은 국제교류의 중요성 역시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3〉 교류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응답항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합계	중위수	평균
중요성	빈도	1	0	3	13	28	53	31	129	6	5.713
	%	0.8	0.0	2.3	10.1	21.7	41.1	24.0	100		
필요성	빈도	0	0	1	12	27	56	33	129	6	5.837
	%	0.0	0.0	0.8	9.3	20.9	43.4	25.6	100		

2) 국제교류의 실태

기초단체의 국제교류 실태는 실질적 교류의 정도, 교류분야, 교류 추진 주체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한 국제교류 담당 공무원의 주관적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국제교류의 실질적 교류 정도 역시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가 아래의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실질적 교류의 정도에 대한 응답결과는 ⑥그렇다와 ④보통이다 각 32명(24.8%)으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이후 ⑤다소 그렇다 26명(20.2%), ③다소 그렇지 않다 15명(11.6%), ②그렇지 않다 10명(7.8%), ①매우 그렇지 않다와 ⑦매우 그렇다 각 7명(5.4%)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질적 교류 정도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65명(50.4%)이고, 중위수는 5점이며, 평균은 4.426점으로 나타나, 기초단체 공무원은 실질적 교류의 정도를 다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 실질적 교류의 정도

응답항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합계	중위수	평균
빈도	7	10	15	32	26	32	7	129	5	4.426
%	5.4	7.8	11.6	24.8	20.2	24.8	5.4	100		

국제교류의 핵심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복수 응답) 결과가 아래의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응답결과는 자매결연이 100명(33.1%)으로 가장 많고, 이후 문화·체육 교류 71명(23.5%), 관광교류 48명(15.9%), 인적 교류 46명(15.2%), 경제·통상 교류 37명(12.3%)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제교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자매결연과 문화·체육 교류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통상 교류나 관광교류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국제교류의 핵심 목적 중 하나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기초단체가 경제·통상 교류나 관광교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5> 교류 분야

응답항목	자매결연	인적 교류	문화·체육 교류	경제·통상 교류	관광교류	합계
빈도	100	46	71	37	48	302
%	33.1	15.2	23.5	12.3	15.9	100

국제교류의 추진 주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아래의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국제교류의 주도적 추진 주체에 대한 응답결과는 단체장이 71명(55.0%)으로 압도적으로 높고, 이후 공무원 51명(39.5%), 시민단체 3명(2.3%), 민간기업 2명(1.6%), 지방의원 및 무응답 각 1명(0.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단체장 우위의 권력구조를 지닌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에서 단체장이 정책결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며, 성공적인 국제교류를 위해서는 단체장 주도에서 탈피하여 시민단체나 민간기업이 국제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6> 추진 주체

응답항목	단체장	지방의원	공무원	민간기업	시민단체	무응답	합계
빈도	71	1	51	2	3	1	129
%	55.0	0.8	39.5	1.6	2.3	0.8	100

3. 국제교류의 영향요인

1) 측정의 신뢰성

연구모형에 포함된 잠재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문항의 기술통계와 신뢰성 분석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제도적 기반(INs)의 측정문항의 중위수는 대부분 4점이고, 국제교

류 담당부서의 권한(q701)이 평균 4.558점으로 가장 높으며, 기능의 충분성(q702)이 4.209점으로 가장 낮다. 인력 전문성(PRO)의 측정문항의 중위수는 대부분 4점이고, 국제적 마인드(q708)가 평균 4.713점으로 가장 높으며, 담당인력의 규모(q705)가 3.798점으로 가장 낮다. 협력적 거버넌스(GOV)의 측정문항의 중위수는 모두 4점이고, 광역단체와의 협력(q802)이 평균 4.178점으로 가장 높으며, 중앙정부와의 협력(q801)이 3.798점으로 가장 낮다. 성과인식(PER)의 측정문항의 중위수는 4~5점이고, 지자체 이미지 제고(q903)가 평균 4.992점으로 가장 높으며, 지역경제 활성화(q902)가 4.388점으로 가장 낮다.

제도적 기반(INS), 인력 전문성(PRO), 협력적 거버넌스(GOV), 성과인식(PER)에 대한 측정의 신뢰성은 내적 일관성 신뢰성을 평가하는 크론바흐 알파 계수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신뢰성 분석결과는 잠재변수별 측정문항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변수로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도적 기반(INS)의 크론바흐 알파 계수는 0.805이고, 인력 전문성(PRO)은 0.881, 협력적 거버넌스(GOV)는 0.876, 성과인식(PER)은 0.891 등으로 나타나 모두 통상적 권고수준인 0.6을 크게 상회한다.⁶⁾

〈표 7〉 측정문항의 기술통계 및 신뢰성 분석 결과(N=129)

잠재변수	측정문항	중위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문항제거 α	전체 α
제도적 기반 (INS)	q701	4	4.558	1.352	1	7	0.739	0.805
	q702	4	4.209	1.235	2	7	0.728	
	q703	4	4.543	1.281	1	7	0.754	
	q704	4	4.395	1.296	1	7	0.798	
인력 전문성 (PRO)	q705	4	3.798	1.481	1	7	0.891	0.881
	q706	4	3.829	1.687	1	7	0.846	
	q707	4	4.302	1.309	1	7	0.832	
	q708	5	4.713	1.220	1	7	0.856	
협력적 거버넌스 (GOV)	q709	4	4.008	1.259	1	7	0.851	0.876
	q801	4	3.798	1.252	1	7	0.844	
	q802	4	4.178	1.278	1	7	0.860	
	q803	4	3.969	1.380	1	7	0.840	
성과인식 (PER)	q804	4	3.938	1.374	1	7	0.842	0.891
	q805	4	4.116	1.412	1	7	0.861	
	q901	4	4.612	1.168	2	7	0.841	
	q902	4	4.388	1.207	1	7	0.873	
	q903	5	4.992	1.135	1	7	0.870	
	q904	5	4.876	1.104	2	7	0.855	

6) 인력 전문성(PRO)의 측정문항 중 담당인력 충분성(q705)을 제거하면 크론바흐 알파 계수가 0.891로 0.01 개선된다. 그러나 담당인력 충분성(q705)을 포함하더라도 신뢰성이 매우 높아 해당 문항을 포함하여 분석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측정의 타당성

(1) 모형적합도

제도적 기반(*INS*), 인력 전문성(*PRO*), 협력적 거버넌스(*GOV*), 성과인식(*PER*)의 측정모형에 대한 구성개념 타당성(construct validity)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적합도 통계치와 권고수준이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기초모형에 비해 수정모형의 모든 적합도 통계치가 개선되었고, 추가한 오차항 간 상관관이 95% 신뢰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수정모형의 모든 절대 적합지수가 보수적인 권고수준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χ^2 는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고, χ^2/df 는 1.268로 3보다 작으며, RMSEA와 SRMR도 각각 권고수준인 0.05와 0.08보다 작다. 또한 상대 적합지수인 CFI와 TLI도 각각 0.980과 0.973으로 권고수준인 0.95보다 크다. 이러한 모형적합도 통계치들은 측정모형이 분석자료에 잘 적합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8>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적합도

구분	$\chi^2(p)$	χ^2/df	RMSEA	SRMR	CFI	TLI
기초모형	297.8(0.000)	2.309(df=129)	0.101	0.068	0.890	0.896
수정모형	147.1(0.084)	1.268(df=116)	0.046	0.051	0.980	0.973
권고수준	p>0.05	<3	<0.05	<0.08	>0.95	>0.95

주. df는 자유도, RMSEA는 근사오차평균자승의 제곱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SRMR은 잔차자승평균의 표준화 제곱근(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CFI는 비교적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TLI는 터커-루이스 적합지수(Tucker-Lewis index)를 각각 의미함

(2) 수렴타당성

측정모형의 수렴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요인계수(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 평균분산 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이하 AVE), 구성개념 신뢰성(construct reliability-이하 CR) 등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가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첫째, 모든 잠재변수의 모든 측정문항의 요인계수가 99.9%의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측정모형에서 설정한 대로 양(+)의 부호이며, 크기는 Hair 외(2010)가 제시한 권고수준인 0.5보다 크다. 또한 표준화 요인계수가 1보다 크거나 표준화 오차분산이 0보다 작은 Heywood 현상도 없다. 둘째, 잠재변수의 AVE는 0.508(제도적 기반)~0.754(성과인식)로 Fornell & Larker(1981)가 제시한 권고수준 0.5보다 크다. 셋째, 잠재변수의 CR은 0.803(제도적 기반)~0.921(성과인식)로 역시 Hair 외(2010)가 제시한 권고수준 0.7보다 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요인계수의 통계적 유의성 및 크기, AVE, CR 등 수렴타당성 평가기준 측면에서 측정모형의 수렴타당성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9〉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N=129)

잠재변수	측정문항	표준화		비표준화		AVE	CR
		요인계수	(표준오차)	요인계수	(표준오차)		
제도적 기반 (INS)	q701	0.7400	(0.0493)***	1.0000		0.508	0.803
	q702	0.8018	(0.0418)***	0.9844	(0.1174)***		
	q703	0.6895	(0.0546)***	0.8783	(0.1204)***		
	q704	0.6043	(0.0633)***	0.7830	(0.1196)***		
인력 전문성 (PRO)	q705	0.6783	(0.0539)***	1.0000		0.616	0.888
	q706	0.7891	(0.0375)***	1.3411	(0.1683)***		
	q707	0.8228	(0.0341)***	1.0772	(0.1305)***		
	q708	0.8163	(0.0353)***	1.0008	(0.1398)***		
협력적 거버넌스 (GOV)	q801	0.7528	(0.0445)***	1.0000		0.572	0.869
	q802	0.6233	(0.0594)***	0.8279	(0.1053)***		
	q803	0.8403	(0.0334)***	1.2389	(0.1293)***		
	q804	0.7575	(0.0438)***	1.1036	(0.1280)***		
성과인식 (PER)	q901	0.8124	(0.0336)***	1.0000		0.745	0.921
	q902	0.9306	(0.0337)***	1.1787	(0.1063)***		
	q903	0.8281	(0.0355)***	0.9909	(0.0943)***		
	q904	0.8771	(0.0305)***	1.0122	(0.0878)***		

+ p<0.1, * p<0.05, ** p<0.01, *** p<0.001

(3) 판별타당성

잠재변수 간 판별타당성을 판정하기 위한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 제곱과 잠재변수별 AVE가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잠재변수의 AVE가 크면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Fornell & Larcker, 1981). 그런데 본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제도적 기반과 인력 전문성 간 판별타당성과 인력 전문성과 협력적 거버넌스 간 판별타당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첫째, 제도적 기반(INS)의 AVE 0.508은 협력적 거버넌스 및 성과인식과의 상관계수 제곱인 0.486 및 0.397보다는 크지만, 인력 전문성과의 상관계수 제곱인 0.699보다는 작다. 둘째, 인력 전문성(PRO)의 AVE 0.616은 협력적 거버넌스 및 성과인식과의 상관계수 제곱인 0.574 및 0.447보다는 크지만, 제도적 기반과의 상관계수 제곱인 0.699보다는 작다. 셋째, 협력적 거버넌스(GOV)의 AVE 0.572는 제도적 기반 및 성과인식과의 상관계수 제곱인 0.486 및 0.556보다는 크지만, 인력 전문성과의 상관계수 제곱인 0.574보다는 작다. 마지막으로, 성과인식(PER)의 AVE 0.745는 제도적 기반, 인력 전문성, 협력적 거버넌스와의 상관계수 제곱인 0.397, 0.447, 0.556보다 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제도적 기반, 인력 전문성, 협력적 거버넌스가 별개의 차원이 아니라 단일차원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판별타당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밝혀진 제도적 기반, 인력 전문성, 협력적 거버넌스는 국제교류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국제교류 실적의 영향요인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에서 심각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유발하지 않을 정도의 상관은 용인할 수 있다. 제도적 기반과 인력 전문성의 상관계수는 0.8361이고 인력 전문성과 협력적 거버넌스의 상관계수는 0.7576으로 다중공선성이 의심되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판별타당성이 부족한 이들 잠재변수가 개별 차원을 대표한다고 간주하고 회귀분석을 수행한 후 다중공선성을 검증하여 처리하고자 한다.⁷⁾

〈표 10〉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 제공

구분	제도적 기반	인력 전문성	협력적 거버넌스	성과인식	AVE
제도적 기반(<i>INS</i>)	1.000				0.508
인력 전문성(<i>PRO</i>)	0.699	1.000			0.616
협력적 거버넌스(<i>GOV</i>)	0.486	0.574	1.000		0.572
성과인식(<i>PER</i>)	0.397	0.447	0.556	1.000	0.745

3) 회귀분석

(1) 기술통계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추정한 회귀모형에 포함된 변수의 기술통계와 자료원이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종속변수인 국제교류 실적(*NIE*)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였고, 잠재변수인 제도적 기반(*INS*), 인력 전문성(*PRO*), 협력적 거버넌스(*GOV*), 성과인식(*PER*)은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요인점수를 이용하였다. 기초단체 수준의 독립변수인 규모의 측정변수인 공무원수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였고, 재정능력의 측정변수인 주민 1인당 자주세입은 행정안전부 재방재정 365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7) 또한 측정문항 간 상관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는 구성개념 타당성보다는 측정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내용을 대표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내용타당성(content validity)이 보다 중요하다.

〈표 11〉 변수의 기술통계(N=129)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자료원
교류 실적(<i>NIE</i>)		0.9070	1.4708	0.0000	8.0000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제도적 기반(<i>INS</i>)		1.3E-09	0.9355	-2.0658	2.6326	설문조사
인력 전문성(<i>PRO</i>)		-1.8E-09	0.9607	-2.1360	2.5675	
협력적 거버넌스(<i>GOV</i>)		4.0E-10	0.8934	-2.4488	2.4870	
성과인식(<i>PER</i>)		-4.1E-09	0.9787	-2.5822	2.1822	
규모	공무원수	936.22	569.46	377.40	4428.8	국가통계포털
	Ln(공무원수)	6.7247	0.4467	5.9333	8.3959	
재정 능력	1인당 자주세입	3095.8	2264.1	238.23	9713.7	지방재정365
	Ln(1인당 자주세입)	7.6688	0.9553	5.4732	9.1813	

(2) 회귀분석 결과

국제교류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한 포아송 회귀모형과 음이항 회귀모형의 추정결과가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과대산포계수 $\alpha=0$ 에 대한 우도비(likelihood ratio) 검증결과($\chi^2=17.520$, $p=0.0000$)는 포아송 회귀모형보다는 음이항 회귀모형이 적절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음이항 회귀모형의 적합도 통계치인 Wald χ^2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chi^2=41.651$, $p=0.0000$) 독립변수의 설정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평균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이하 VIF)가 3.6485이고 개별 독립변수의 VIF가 모두 10 이하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검증은 음이항 회귀모형의 결과에 기초하였고, 독립변수의 영향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사건발생 빈도율(incident rate ratio-이하 IRR)을 이용하여 해석하였다.⁸⁾

첫째, 분석결과는 ‘국제교류의 제도적 기반이 좋을수록 국제교류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연구가설을 지지한다. 제도적 기반(*INS*)의 회귀계수는 95.0%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연구가설에서 예측한대로 양(+)의 부호를 지니고 있다. 제도적 기반의 IRR 2.1648은 제도적 기반의 요인점수가 1점 증가할 때 국제교류 누적건수가 116.48%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제도적 기반이 좋을수록 국제교류 실적이 높을 것이라는 이론적 주장 및 이를 경험적으로 입증한 선행연구(우양호·이정석, 2010)의 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분석결과는 ‘국제교류 담당인력 전문성이 좋을수록 국제교류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연구가설을 지지하지 않는다. 인력 전문성(*PRO*)의 회귀계수는 연구가설에서 예측한 것과 달리 음(-)의 부호를 지니고 있고, 90.0% 신뢰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인력 전문성이 국제교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론적 주장 및 이를

8) IRR은 양의 값을 지니고 1보다 크면 종속변수를 증가시키고 작으면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독립변수 1단위 증가는 종속변수를 $(IRR-1)*100\%$ 만큼 증가시키거나 IRR배 만큼 증가시킨다고 해석한다.

입증한 경험적 선행연구(우양호·이정석, 2010; 이정주 외, 2013)의 결과와 상충된다. 본 연구와 경험적 선행연구의 일치하지 않는 결과는 연구대상, 잠재변수의 측정방법, 연구모형 등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분석결과는 '국제교류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이 좋을수록 국제교류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연구가설을 지지하지 않는다. 협력적 거버넌스(*GOV*)의 회귀계수는 연구가설의 예측과 달리 음(-)의 부호를 지니고 있고, 90.0% 신뢰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 이러한 결과는 경험적 선행연구(우양호·이정석, 2010; 이정주 외, 2013; 하영수, 2001)의 결과와 상충된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상충은 연구대상, 잠재변수의 측정방법, 연구모형 등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확립이 어렵거나 거버넌스가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분석결과는 '국제교류의 성과에 대한 인식이 좋을수록 국제교류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연구가설을 지지한다. 성과인식(*PER*)의 회귀계수는 95.0%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연구가설에서 예측한대로 양(+)⁹⁾의 부호를 지니고 있다. 성과인식의 IRR 1.5018은 성과인식의 요인점수가 1점 증가할 때 국제교류 누적건수가 50.18%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국제교류의 성과에 대한 공무원의 긍정적 인식과 국제교류 실적 사이에 긍정적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이론적 주장 및 이를 경험적으로 입증한 선행연구(이주호 외, 2007)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는 규모 및 재정능력과 국제교류 실적 사이에 긍정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규모와 재정능력의 회귀계수는 각각 99.9%와 99.0%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예측한대로 양(+)⁹⁾의 부호를 지니고 있다. 규모의 회귀계수 0.9705는 기초단체의 공무원 현원이 1% 증가할 때 국제교류 누적건수는 0.9705% 증가하고, 재정능력의 회귀계수 0.5867은 기초단체의 1인당 자주세입 1% 증가는 국제교류 누적건수를 0.5867%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⁹⁾ 이러한 결과는 규모가 크고 재정능력이 좋을수록 교류수준이 높다는 이론적 주장 및 선행연구(송하중 외, 2010; 정명은, 2012)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9) 음이항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수가 자연대수를 취한 경우, 회귀계수는 독립변수의 1% 변화에 의한 종속변수의 %변화를 나타낸다.

〈표 12〉 회귀분석 결과(N=129)

변수	모형	VIF	포아송		음이항		
			회귀계수	(표준오차)	IRR	회귀계수	(표준오차)
제도적 기반(<i>INS</i>)		6.7874	0.6813	(0.2452)**	2.1648	0.7723	(0.3389)*
인력 전문성(<i>PRO</i>)		5.5099	-0.5222	(0.2702)+	0.5663	-0.5687	(0.3641)
협력적 거버넌스(<i>GOV</i>)		4.2539	0.0172	(0.2311)	0.9350	-0.0673	(0.2820)
성과인식(<i>PER</i>)		2.5782	0.3678	(0.1616)*	1.5018	0.4066	(0.1950)*
규모: Ln(공무원수)		1.4492	0.9985	(0.2373)***	2.6392	0.9705	(0.1603)***
재정능력: Ln(1인당 자주세입)		1.3126	0.6409	(0.1523)***	1.7980	0.5867	(0.2970)**
상수항			-12.014	(2.5305)***	1.1E-5	-11.405	(3.3928)***
과대산포 $\chi^2(p)$						17.520	(0.0000)
Wald $\chi^2(p)$			61.221	(0.0000)		41.651	(0.0000)
Pseudo R^2			0.1582			0.0891	

+ p<0.1, * p<0.05, ** p<0.01, *** p<0.001

V. 결론

1. 연구의 결과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초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객관적 현황과 공무원의 주관적 인식을 분석하고, 국제교류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검증하였다. 먼저, 객관적 현황 분석 결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지방자치제의 부활 이후 폭증하였으나, 중국, 일본, 미국 등 일부 국가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무원의 주관적 인식조사 결과, 공무원들은 국제교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실질적 교류의 정도는 보통수준이고, 국제교류는 형식적인 자매결연 중심이며, 핵심 주체는 단체장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크론바흐 알파와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잠재변수의 측정 모형은 신뢰성과 타당성이 우수 또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음이항 회귀분석 결과, 제도적 기반과 성과인식은 교류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을 지지하고 규모와 재정능력도 예측대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인력 전문성과 협력적 거버넌스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의 함의

본 연구는 주관적 인식조사와 객관적 통계자료의 동시 활용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

체 국제교류에 대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교류의 내실화, 제도적 기반 구축, 긍정적 성과인식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학술적 및 정책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본 연구는 객관적 통계자료와 주관적 인식조사 자료를 함께 활용하여 선행연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국제교류에 관한 선행연구는 모두 객관적 통계자료(이정주 외, 2001; 정명은, 2012) 또는 이해관계자의 주관적 인식 자료(우양호·이정석, 2010; 이정주 외, 2013; 하영수, 2001)에 배타적으로 의존하였다. 본 연구는 개관적 통계자료인 규모와 재정능력의 영향을 통제함으로써, 공무원의 주관적 인식에 기초하여 측정한 제도적 기반 등의 잠재변수와 국제교류 실적 사이의 보다 타당한 관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규모와 재정능력을 포함한 후에 인력 전문성의 통계적 유의성과 제도적 기반 및 성과인식의 회귀계수 크기가 변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규모와 재정능력이 혼란변수(confounding variable)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국제교류의 양적 성장보다는 내실화를 통한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객관적 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가 팔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이룩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국제교류 담당 공무원들은 실질적 교류 정도를 보통수준으로 인식하고 있고, 기초단체의 국제교류는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경제통상과 관광교류보다는 단순 자매교류나 문화체육교류에 치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이제는 기존의 국제교류를 내실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형식적인 자매결연에서 경제통상 및 관광교류 등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교류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는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견고한 제도적 기반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선행연구는 전담조직 운영, 안정적 예산 확보, 관련 조례의 정비 등을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차원의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김부찬 외, 2007; 김형수, 2017; 박용길, 2003; 유병선, 2018; 이성근·서동수, 2008; 전병관, 2009). 그런데 본 연구는 이러한 활성화 방안 연구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음이항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제교류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부여하고,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며, 조례제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교류의 성과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긍정적 인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선행연구는 국제교류의 필요성, 중요성, 성과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긍정적 기대가 국제교류의 추진, 내실화, 활성화의 전제조건이라고 한다(이주호 외, 2007; Ariño 외, 1997; Harrison, 2007; Medina, 1996 - 우양호·이정석, 2010: 401에서 재인용). 본 연구는 음이항 회귀분석을 통해 공무원이 국제교류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국제교류 실적이 좋다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선행연구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국제교류가 지역경제 활성화, 기초단체 이미지 제고, 기초단체 국제화 수준 제고 등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이해관계자의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는 것이 국제교류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3.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후속 연구는 본 연구가 지닌 문제를 극복 또는 보완하여 국제교류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선, 본 연구의 설문조사 응답률은 57.1%로 표본의 대표성이 부족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대표성이 높은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일반화 가능성이 높은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국제교류의 객관적 여건 중 규모와 재정능력만을 모형에 반영하였다. 후속 연구는 산업구조, 단체장 특성, 시민단체 활동 수준 등 보다 다양한 객관적 여건을 반영한 모형을 설정하고 분석하여 보다 타당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는 객관적 통계자료와 주관적 인식자료를 모두 활용하였으나, 분석방법으로는 기술통계와 포아송 및 음이항 회귀분석 등 계량적 분석방법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후속 연구는 이해관계자 인터뷰, 사례분석, 내용분석 등의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하면, 본 연구를 포함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국제교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는 공무원들은 국제교류의 핵심 주체가 단체장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실제 국제교류를 주도하는 단체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국제교류의 추진, 활성화,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미연(2010).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확산과 동형화.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7(3): 16-83.
 김부찬·양덕순·고승환(2007). 「지방외교시대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제주: 제주발전연구원.
 김재근·서인석(2012).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구조적 특성 분석. 「지방행정연구」. 26(3): 409-438.
 김지희(2008). 서유럽의 지방외교: 영국, 프랑스 지자체의 국제협력현황과 대응전략. 「비교민주주의 연구」. 4(2): 87-106.

- 김판석(2000).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발전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2(4): 5-31.
- 김형수(2017).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외교, 무엇이 문제인가. 「세계와 도시」. 18(특집): 41-53.
- 김형수(2021).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전략: 개정 지방자치법과 공고외교법의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26(3): 75-95.
- 김형수·노병렬(2016).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 「세계지역연구논총」. 34(2): 91-113.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https://www.gaok.or.kr/gaok/exchange/list.do?menuNo=200080>. (2021.12.17).
- 박용길(2003). 국제화와 지방정부의 대응: 강원도의 국제교류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12(2): 119-145.
- 성태규·이재현(2007).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실태 및 활성화 연구. 「사회과학연구」. 18: 17-42.
- 송두범(2004). 충청남도 자치단체의 국제자매결연사업 실태 및 과제. 「열린충남」. 29: 1-11.
- 송하중·윤지용·김주경(2010).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6(1): 73-97.
- 신기현(1998).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효율화 방안. 「지방자치연구」. 6: 85-103.
- 양기호(2006). 지방정부의 외국인대책과 내향적 국제화.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8(2): 67-85.
- 오니시 유타카(2015). 한일 지방자치단체 협력의 전개: 자매도시 결연전략. 「한국과 국제정치」. 3(1): 151-182.
- 오성동(2007). 한·중 지방정부간 국제교류의 새로운 패러다임: 경제·문화분야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경영사학회」. 43: 131-156.
- 외교부(2021). 외교부, 지자체와 함께하는 개발협력을 모색하다.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1976. (2022.05.10).
- 우양호·이정석(2010). 지방정부 국제교류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도시간 자매결연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4(4): 393-422.
- 유병선(2018). 지방정부의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세종연구원(기본연구 2018-2」. 1-104.
- 이갑영(2005).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평가와 전략: 문제점과 개선점. 「지방행정」. 54: 41-50.
- 이성근·서동수(2008).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실태분석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 경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혁신논집」. 3(3): 123-144.
- 이정남(2006). 동아시아 협력 네트워크와 지방의 역할: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9(4): 279-305.
- 이정주·박희방·최외출(2001).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효과분석을 통한 국제교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2): 143-169.
- 이정주·최외출(200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효과 분석을 통한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5(2): 145-162.

- 이정주·최의출·김한양(201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실태 분석: 국제교류 담당 공무원의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7(3): 25-48.
- 이주호·강은방·유건상·이재은(2007).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9(1): 19-44.
- 장세길(2008). 친선교류에서 지방외교로: 전라북도 사례로 본 지방외교의 형성과 변화. 「사회과학연구」. 16(1): 462-495.
- 전국시도지사협의회(2015).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매뉴얼」. 서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정명은(2012). 지방정부의 경쟁적 세계화: 수직적 확산과 수평적 확산. 「한국행정학보」. 46(3): 241-270.
- 정병관(2009). 지방자치단체의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충남 아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열린충남」. 46: 40-56.
- 하영수(2001).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실태분석과 함의. 「지방정부연구」. 5(2): 117-134.
- 홍성우(2011).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현황과 공무원 인식수준의 비교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3(1): 197-215.
- Ariño, A., Abramov, M., Skorobogatykh, I., Rykounina, I., & Vilà, J(1997). Partner Selection and Trust Building in West European-Russian Joint Ventures. *International Studies of Management & Organization*. 27(1): 19-37.
- Clingendael- the Netherlands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https://www.clingendael.org/>. (2022.04.19).
- Coleman, J. S(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supplement): 95-120.
- Fornell, C. & Larker, D. F(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Harrison, J(2007). From Competitive Regions to Competitive City-Regions: A New Orthodoxy, But Some Old Mistakes.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7(3): 311-332.
- Keohane, R. O. & Nye, J. S(1974). Transgovernmental Rela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World Politics*. 27(1): 39-62.
- Medina, N(1996). A Role for International Strategic Alliances as Agents of Economic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Regional Economic Groups: The Case of Latin America. Unpublished Dissertation, University of Oregon.
- Nye, J. S(2004).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ed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 Pluijm, van der Rogier., & Melissen, J(2007). *City Diplomacy: The Expanding Role of Cities in International Politics*. Netherlands: Clingendael.
- Risse-Kappen, T(1995). *Bringing Transnational Relations Back in: Non-State Actors, Domestic Structures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 <https://www.uclg.org/>. (2022.05.12).

Watson, D(2000). The International Resources Cities Program: Building Capacity in Bulgarian Local Government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0(5): 457-463.

Wendt, A(1987). The Agent-Structure Proble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Organization*. 41(3): 335-370.

* 이석환(李錫煥): 뉴저지주립대(Rutgers)에서 Tax Competition among Governments and the Effects on Government Performance: Empirical Evidence from Local Governments in New Jersey(2009)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지방재정, 정책평가, 연구방법론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Perceptions of Social Performance in Public Enterprises and Early Job Seekers' Intentions to Apply(2021), 정책확산 결과로서의 수렴 또는 분화: 기초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를 대상으로(2021), 광역자치단체 공공갈등 관리제도의 확산(2021) 등이 있다(lshufo@hanyang.ac.kr).

* 이충희(李忠熙): 글라스고우대학(University of Glasgow)에서 The UK's Negotiation of Its EU Budget Rebate(2012)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양대학교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유럽정치, 영국의 정당정책,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아프리카 지역 통합 등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The Effects of Business Strategy and Organizational Culture of Korean Companies on Market Satisfaction: The Case of the African Market(2022), 마그레브 지역 내 K-콘텐츠(드라마, 영화, K-Pop) 확산과 파급효과 현황 분석: 알제리와 모로코를 중심으로(2020) 등이 있다(axialage74@hanyang.ac.kr).